

# 대한민국 2015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 개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6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계속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8월 19일에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2013년 12월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종교 화합을 모색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안들을 정부 및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했다.

##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체 인구를 4,910만 명(2015년 7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0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대략적으로 불교 24%, 개신교 24%, 가톨릭 8%로 조사됐으며 43%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순진리회, 통일교,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인구는 모두 합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다. 또한, 거의 전원이 주한 외국인으로 이뤄진 소수의 유대인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무슬림 인구는 135,000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약 10만 명은 주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였다.

##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 법적 토대

헌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다양한 종교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확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률에 의해 20~30 세 사이에 속하는 사실상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복무기간은 병과(兵科)에 따라 21~24 개월이다. 법률은 대체복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반자는 최고 3 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8 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및 예비군 복무 의무가 면제되며 추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예비군 복무 의무는 8 년 동안 계속되며 1 년에 몇 차례 훈련을 받는다. 벌금은 관할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초 유죄 판결시 일반적으로 20 만원(\$170) 선이다. 유죄 판결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벌금이 10 만원~30 만원(\$85-255)씩 증가한다. 법률은 위반자를 200 만원(\$1,7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벌금형 대신 1 일에서 3 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정부는 종교단체나 외국인 종교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관들은 세제혜택을 위해 종교활동을 입증하는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보존법에 따라 불교 사찰 등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교부금이 지급된다.

## 정부 관행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고 수감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8 개월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더 이상 추가로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 진출이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는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 비정부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의 보고에 의하면, 8월 30일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자 542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 중 50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123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체 건수(823)는 2014년의 789건보다 증가했다.

5월과 8월에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1월에 검찰이 항소한 광주의 한 소송건은 판결이 번복되어 피고 유죄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다섯 개의 다른 소송건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다.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950년 이래 한국에서 18,55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8월 19일에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2013년 12월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파룬다파불학회(Korean Falun Dafa Association)는 파룬궁 산하 공연단 셴윈(神韻-Shen Yun)이 상업 공연을 위해 공공장소를 예약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계속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에 따르면 셴윈은 적당한 규모의 장소를 확보할 수 없었고 결국 해당 연도에 서울에서의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다.

###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10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에서의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5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는 관리자가 무슬림 여성에게 근무시간에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 건은 상담과 관리자의 사과로 해결되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7월에 일부 반유대주의적으로 해석되는 발언과 만화를 회사 홈페이지에 잠시 게재한 바 있다. 해당 발언 등은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로서 유대인 CEO를 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게재되었다. 삼성은 1주일 내로 해당 발언과 만화를 삭제하고 반유대주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 상호 이해,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사적으로, 혹은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의 자유, 화해, 종교간 공존을 증진하기 위해 세미나, 전시회, 예술문화 공연, 종교간 교류 등 여러 종교행사에 다수의 종교지도자들을 초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는 11월에 북한에서 남북종교인 모임을 개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소 4억 4천만 원(\$374,180)을 지원하여 이러한 행사들을 후원했다.

####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의원 등 정부 당국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 등 종교의 자유와 관용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종교 단체와 비정부기구의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의 자유 현황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문제를 협의했다.